

오늘의 스크랩

2019년 09월 18일

-조선일보-

오늘의 주요기사

2019년 09월 18일 (수)

순서	제 목	매체	카테고리	페이지
1	검찰,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	조선일보	종합	1
2	검찰 조국 주범, 조범동 공범 판단... 사실상 ฆ� 직접투자로 봐	조선일보	종합	2
3	정진 지뢰는 어뢰와 다르다 궤변	조선일보	종합	3
4	국회 찾은 조국한테... 장관직 내려놓으라는게 국민 의견	조선일보	종합	4
5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 기업들 공포	조선일보	종합	5
6	파주서 돼지열병 연천도 의심신고	조선일보	종합	6
7	이해 안 되는 대통령의 해명	조선일보	오피니언	7
8	이제 北과 싸우다 목숨 잃으면 戰死 아닌 公死 되나	조선일보	오피니언	8

검찰,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

아내와 사모펀드 투자내용 공유한 단서 확보, 소환조사 방침
구속된 5촌조카 체포영장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16일 구속)씨의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과 아내 정씨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공직자가 아닌 조씨를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

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정씨를 먼저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조 장관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WFM의 우모 전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로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이곳에서 최근까지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을 정씨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고, 우씨를 상대로 돈을 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주현·이정규 기자 기사 A3면

검찰 ‘조국 주범, 조범동 공범’ 판단… 사실상 ㄱ 직접투자로 봐

(5층 조카)

(조국)

조사받은 업체 “조국 부부가 투자내역 알고 있다는 말 파다했다”
자산관리 증권사 직원 “조국 아내가 펀드 차명투자 방안 상담”
법무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땀 ‘거취문제’ 불거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그랬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민감한 부분인 만큼 검찰은 그동안 이에 대해 함구해왔다. 하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지난 16일 구속)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씨를 통해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主犯)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설립에서부터 투자까지 조 장관 일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조씨의 아내에게 총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 2억 5000만 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조 장관 부부의 돈이 운용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 운용사가 조국 펀드까지 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하는 것을 상담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씨가 조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조범동씨는 2017년 8월 정씨로부터 조국 펀드에 투자를 받고 난 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국 민정수석 배우자가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진술을 통해 조씨와 조 장관 일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코링크PE 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할지 정씨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하고, 공직을 이용한 주식 등 재산 취득을 규제하는 법이다. 조국 법무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가 자신들 돈으로 설립된 펀드 운용사를 통해 직접 투자를 했다면 이 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주식배치 신탁 거부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관 등 공직자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 법에 따라 해임·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마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씨는 “정씨가 WFM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코링크PE가 투자할 곳을 정씨가 미리 알고 알아봤다는 의미다. 정씨는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갔다. 한 변호사는 “드러난 정황을 보면 조 장관 일가와 조씨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것 같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펀드의 투자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선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코링크PE ‘투자운용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급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코링크PE 대표 이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범동씨가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해 지난달 21일에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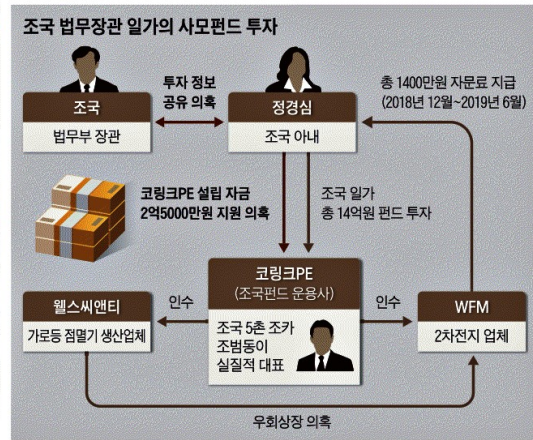
검찰 판단이 맞다면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하지만, 인사청문회 법에는 청문 대상자가 거짓말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은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장 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리를 유지한 전례는 거의 없다. 현 정권 들어서도 2017년 11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흡소핑 재승인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퇴했다.

윤주현·김정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이 17일 ‘외출’로 표시된 채 비워져 있다. 법무부는 이날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진 “지뢰는 어뢰와 다르다” 궤변

〈보훈심사위원장〉

河중사 公傷 판정의 전말

하재현 중사의 공상(公傷) 판정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은 17일 본지 통화에서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지뢰는 (천안함 폭침 도발의) 어뢰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보훈처장이었던 피 전 처장은 “나는 전상으로 하라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고 했다.

◇정진 “어뢰는 지뢰와 달라”

정 위원장은 “내가 알기로는 전(前) 정부의 영웅이기 때문에 전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은 없었다”며 “공상 판정을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시행령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구체적으로 해놓은 조항을 유추해 조항에 없는 부분에 전상을 주기는 참 난감한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천안함 때는 어뢰로 타격을 입었는데, 어뢰는 발사한 사람이 있는 것”이라며 “어뢰 피격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명백하게 교전에 준해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뢰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조항이 없을뿐더러 지뢰는 피아 구분도 없고 설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지 않다”며 “아마도 국방부가 지뢰 제거를 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해 (군 인사법에) 지뢰 관련 조항들을 마련한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뢰로 전상 처리된 사례를 찾아봤는데 적지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경우 한 번뿐이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북의 명백한



피우진
前보훈처장

정진
보훈심사위원장

정진 “지뢰는 피아 구분도 없고 설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지 않아”

피우진 “규정 고쳐 戰傷 주려했는데 보훈처 나오고보니 公傷 처리돼... 내가 결재했는지는 확인 안된다”

도발을 우발적 사고로 둔갑시킨 불순한 주장”이란 지적이 나왔다. 예비역 육군 장성 A씨는 “북이 우리 장병 살상을 노리고 몰래 설치한 공격용 목함지뢰를 전방 지역에 방어용으로 깔아놓은 대인지뢰와 동일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하 중사가 재심 신청을 했으니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며 “재판이 1·2·3심이 있듯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달라지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하 중사가 ‘전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미비나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법원에서 받아온 판결로 개정될 수 있다”고 했다.

◇피우진 “지금 단단히 화가 나”

피 전 처장은 “나는 30년간 군 복무를 했고,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을 대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하 중사가 당연히 전상이라고 생각했고 여러 번 전상을 줘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피 전 처장은 “(보훈심사위에서 공상 얘기를 꺼내자)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다”며 “하지만 시행령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판정을 기다리는 하 중사에게 ‘내부 규정을 고쳐서라도 전상을 주려 하니 기다려 달라’고 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보훈처를 나오고 보니 공상 처리가 됐다”고 했다.

피 전 처장은 “국가유공자 전·공상 처리는 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고 결과를 보고한다”면서도 “내가 마지막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보고) 전에 다시 한 번 심의하고, 규정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니 하 중사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한 것까지만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보훈 처장직을 내려놔기 때문에...”라고 했다.

피 전 처장은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온 것이기 때문에 체육 활동을 하다 다쳤든 다른 활동을 하다 다쳤든 활동 지역이 모두 작전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전·공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라며 “보훈처장 재직 시절 가장 강하게 주장해왔던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하 중사를 여러 번 보기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상처입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 열받고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다”며 “하 중사의 공상 판정을 내가 결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7일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피 전 처장은 1주일 뒤 퇴임했다. 양승식 기자

국회 찾은 조국한테... “장관직 내려놓으라는게 국민 의견”

-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

각종 의혹 질문에 조국은 침묵
한국당·바른미래는 예방 거절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조국 법무 장관은 자신과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장관이 취임 후 예방하면 통상 여야 지도부가 덕담을 건네지만 이날은 자진 사퇴 요구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민과 당대표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흑독한 청문회를 거쳤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법무·검찰 개혁에 잘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두 사람이 만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엔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실에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몰린 건 처음”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 장관에게 “축하만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조 장

관이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 응원하겠지만 방해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겠다”고 했다.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이 국민께 부끄럽고,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국민 의견인데 깊게 생각해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말씀 깊이 새기겠다”고 했지만 난처한 표정이 역력했다. 조 장관은 또 “가족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을 드린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 중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정부 질문 실시 합의

한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17일 합의했다.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사회·문화에 대한 질의가 진행된다. 김동하 기자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 기업들 공포

**국민연금의 임원 해임권 강화 등
논란 사안들, 국회 안 거치고 강행**

내년부터 국민연금은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대기업 임원의 해임을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청구소송도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정권 입김에 휘둘리는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단순 투자 명목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분 변동 5일 내 보고’ 등 의무 사항이 많은 ‘경영참여목적 투자자’만 갖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

안’ 23가지 정책을 내놔다. 모두 국회 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가능한 내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 내용 브리핑을 사실상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정부 입맛에 맞는 시행령·시행규칙들을 대거 내놓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고위임원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선전해야 하는 정부·여당은 법 개정보다는 정부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하위법령 개정애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계에는 ‘법보다 무서운 시행령 공포’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 기사 A2면

파주서 돼지열병 연천도 의심신고

국내 첫 발생 3950마리 살처분
정부, 9·19선언 파주 행사 취소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장에서 돼지 다섯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농장과 관련된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고, 확진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1주일 동안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도 금지된다. 이날 오후 경기 연천의 한 양돈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검사 결과는 18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급성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데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가축 전염병이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 질병은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잔반 또는 해외에 다녀온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데, 파주 농가는 잔반을 사료로 쓰지 않았고 농장주나 직원들의 해외여행도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 멧돼지를 통해 전파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1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려던 ‘평화열차’ 행사를 취소하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약식 기념식만 갖기로 결정했다.

최규민·안준용 기자 기사 A10면

이해 안 되는 대통령의 해명

데스크에서



곽수근

사회정책부 차장

‘정부 뭐 하나? 똑똑히 해라’ (2006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중) ‘되게 하는 지혜를 모아보자’ (2003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중) ….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남긴 친필 메모 266건이 공개됐다. 정상회담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이 메모지에 직접 쓴 글로,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적’ (2007년 수보 회의) 등 대통령의 심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등 보좌·자문 기관이 생산한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이 ‘대통령 기록관’ (Presidential Archives)이다.

정부가 예산 172억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열려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밝혀지자, 문 대통령은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도 했다.

정부가 예산 172억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열려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밝혀지자, 문 대통령은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도 했다.

왜 측근들이 대통령 기록관을 추진해 문제를 일으켰는가. 이는 기록관이 문 대통령에게 갖는 남다른 의미를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된다. 지금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 (2016년 개관)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이 결정됐다.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통합 기록관에서 관리할지, 대통령별로 개별 기록관에서 관리할지 논의하다 통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기가 사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벌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자기 기록을 편리하게 열람하고 활용하겠다고 대통령 기록물 76만9000여 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가져간 것이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록물 이관 등을 총괄했다. 2013년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담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 기록관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초(史草) 실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셈이다.

재작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민주당)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기록관을 건립하면 봉하마을 건처럼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반출이 합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연구 용역을 작년 7~11월에 끝냈다. 행안부는 올해 1~3월에 청와대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대해 협의했고, 행안부 차관과 장관 보고를 차례로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정 과제로 1년 넘게 착착 진행해온 사안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펄쩍 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묻는데 대통령이 대로(大怒)로 서둘러 입을 막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국민이 있는 것이다.

이제 北과 싸우다 목숨 잃으면 戰死 아닌 公死 되나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2015년 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지뢰 폭발로 ‘몸이 공중에 뿔뿔이 나뉘고 피투성이가 된 두 다리가 철조망에 걸린 채 쓰러지는’ 참사를 겪었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전(前) 정권 영웅’ 운운하며 훈련 중 부상자처럼 취급한 데 대해 “이제 북과 싸우다 죽으면 전사(戰死)가 아닌 공사(公死)가 되느냐” “어떤 군인이 몸 바쳐 나라를 지키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문제는 재심한다고 넘길 사안이 아니다.

2006년 이라크전에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미군 중사가 치료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기장이 마이크를 들고 “우리 비행기에 영웅이 한 분 타셨다”며 중사 이름과 사연을 소개했다. “우리 영웅과 그의 부인을 잊지 마세요”라는 말이 끝나자 모든 승객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아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도착한 집은 중사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리가 돼 있었고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미국 식당에선 군인이란 이유

만으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는 일이 적지 않다. 미국의 진짜 힘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북한도 부상 군인에게 ‘특급 대우’를 한다. 북에서 돈벌이가 좋은 택시 사업권까지 준다고 한다. 세계 모든 국가가 ‘보훈’을 국민 통합의 터전으로 삼는다.

이 정권 보훈처는 자진 월북해 6·25전쟁 때 공을 세워 김일성에 게서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가 하면 역대 정권에서 간첩 활동 전력이 있다며 계속 탈락시켰던 여당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도 밀어붙였다. 청와대는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희생자 유족들을 불러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실린 책자를 나눠 줬다. 참석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3년 연속 현충일에 ‘6·25’를 언급하지 않았고 6·25 남침 공로자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더니 이제 북의 공격으로 다리를 잃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나라로 생각한다면 이런 만행은 도저히 할 수 없다.